

일본 수출규제, 한일 관계 동향(2020.10.26.~2020.10.31.)

1. 수출규제 관련

- 닛케이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서 해결책을 낸다면 양국 정부 간 신뢰가 회복되어 수출규제 조치도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사설을 게재¹⁾
- 일본 언론사인 닛케이는 문 대통령의 “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함께 찾고 싶다”라는 표현을 인용, 먼저 한국이 일본 측도 납득할 타개책을 제시해야 하며, 그럴 경우 수출규제도 종료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
- 한편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진행해 온 수출관리제도 관련 인원 확충 및 법 개정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

2. 미츠비시 중공업 자산매각 공시송달 관련

- NHK는 한국 법원이 피고인 미츠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관련하여 공시 송달 절차를 실시했다고 보도²⁾
-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미츠비시중공업에게 정신대 관련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나,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(1965)에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미츠비시중공업도 배상에 응하지 않음.
- 이러한 가운데 원고 측은 10월 29일 미츠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(상표권, 특허권 등)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실시했다고 발표
- 대전지방법원은 10월 29일부로 미츠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의 압류 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³⁾
- 자산매각 관련 공시송달 절차는 일본제철(구 신일철주금)에 이어 두 번째임.

1) 「「徴用工」から日韓を動かそう(社説)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10. 30).

2) 「「徴用」で韓国裁判所 三菱重工業の資産売却の書類を公示送達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10. 29).

3) 「三菱重資産売却手続き、韓国地裁、挺身隊訴訟で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10. 30).

- 공시송달은 규정에 따라 11월 10일에는 심문서 등이 미츠비시중공업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, 12월 30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3. 한일 외무국장급 회담 관련

□ 10월 29일 한국 외교부 김정환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(滝崎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⁴⁾

- (강제징용 배상판결) 타키자키 국장은 “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한다”고 발언하였으며, 한국 측 제안을 거절

-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에 응한다면, 후에 한국 정부가 배상금액을 전액 메우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지만, 일본 정부는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거절함.⁵⁾

* 한국 정부는 2020년초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징용문제 해법 검토에 착수하여 배상액을 메우는 방안을 타진하였지만, 일본 측은 “기업의 지출이 보전된다 하더라도, 판결의 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”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.

- (한중일 정상회담) 한국 측은 연내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으며,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

- (수출규제) 한국 측은 일본이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의 조기 철회를 요구

- (후쿠시마 원전 오염수) 한국 측은 도쿄전력이 검토중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 처리수 관련하여 일본 측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, 일본 측은 적극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방침이라고 전달⁶⁾

4) 「元徴用工、韓国に解決策要求、判決から2年、日韓局長、8カ月ぶり対面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10. 30).

5) 「韓国提案、日本は乗らず 元徴用工問題「賠償応じれば、後に穴埋め」」, 「朝日新聞」, (2020. 10. 31).

6) 「元徴用工問題：徴用工問題返答なく 対話継続は一致 日韓局長協議」, 「毎日新聞」, (2020. 10. 30). 및 「徴用工 韓国に解決要求 日韓局長会談、菅内閣で初」, (2020. 10. 30).

- *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방류 관련하여 검토하고 10월 내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, 여론으로 인해 보류중

4. 자산매각 관련 일본 정부의 대응

-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 측에 실시할 대항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보도
-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미 공무원의 비자발급 정지,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등 총 40개 정도의 대항 조치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도(2020. 10. 31).⁷⁾
- 산케이신문도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 및 수출관세의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(2020. 10. 31)⁸⁾
- 다만 산케이신문은 북한 피랍자 문제,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한일 및 한미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손해가 적지 않다고 보도함.

7) 각주 5의 아사히신문

8) 「現金化備え対抗策準備 徴用工訴訟 韓国対応見極め」, 「産経新聞」, (2020. 10. 30).